

제3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자 의원 대표 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숙 자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서초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는 다른 공유재산과 달리 민간자본으로 조성되어
기부채납으로 서울시 소유가 되면서 지금까지 기존 상가
상인들의 영업을 계속해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비대면 거래로 유통환경이 변화되면서
지하도상가의 매출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도입된
상가 단위 최고가입찰 제도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하나 둘 공실이 늘어나고 상권이 침체되며
한때 서울시의 대표 상점가였던 지하도상가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지역구인 고속버스터미널 상가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함께 법인을 구성하고, 고투몰이란 상권

브랜드를 만들었으며,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최고가입찰에서 상인들의 법인이 낙찰을 받았지만 임대료가 종전과 비교해 약 46% 이상이 증가한 임대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견디며, 엔데믹만을 기다려 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비대면·온라인화가 더욱 가속화되었고,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 심화되면서 상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폭탄에 희망을 잃고 벌써 폐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나마 지하도 상가 중 장사가 잘 된다는 고속버스터미널 상가도 과거 다른 지하도 상가가 침체기를 거치다가 상권이 몰락한 수순을 그대로 밟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지하도 상가의 황폐화를 수수방관했던 서울시는 이번에도 원칙을 이야기하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번 상권이 망가지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심지어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복구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부터 상인들의 생존터인 지하도상가 상권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도상가의 대부료를 1000분의 50으로 인하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시는 다른 공유재산과의 형평성, 세입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개 지하도상가 중 임대료가 과거 10년 전보다 인상된 곳은 종로4가, 명동역, 터미널역, 강남역 4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상가들은 모두 침체에 빠져 임대료가 줄어들면서 서울시의 세입이 영구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인 형평성과 당장의 세입 감소를 이유로 지하도상가 운영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결과가 됩니다.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임대료
인상을 유예하여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숨 쉴 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